

정책제언

## 수소차는 트럭·버스 등 상용차로 활용해야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래 수소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가 언급된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뽑는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등 무공해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며, 10~20년 소요되는 미래형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소전기차의 활용에 대하여 열심히 진행해 왔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정도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품이 많은 무리한 진행이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은 수소전기차를 활용하기에는 인프라 문제 등 해결과제가 너무 많아서 자기 몸을 태워 거름이 되는 ‘춧물’ 역할만 한다는 언급이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이 수소전기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한다는 언급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해결과제가 많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춧물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현재 보급되는 승용 수소전기차는 활성화되기 위해 쏟아 붓는 비용이 너무 크다. 특히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활성화해야 하는데 해외 선진국도 테스트베드 형태로 진행 중인 만큼 너무 앞서가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도 수소전기차 글로벌 3대장 중 하나라는 혼다의 ‘클레리티’가 단종되어 현대의 ‘넥소’와 토요타의 ‘미라이’ 만이 7년 이상을 유일하게 싸우는 승용모델로 남았다. 후속 모델도 출시되지 않을 만큼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모델이 수소전기차다.

그렇게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국내 수소충전소가 약 135기 정도에 머무를 정도로 보급이 지지부진하고, 승용 수소충전기 한기에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무리한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은 수소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점차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승용 모델 중심이 아닌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상용 모델 중심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승용 모델은 자사의 기술을 자랑하는 적자 형태의 부류인 만큼 실질적으로 해결가능하고 수소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용모델이 가장 최적이다. 이른바 장거리 트레일러, 대형 트럭, 기차 및 트램, 선박은 물론 건설기계 등 중장비가 해당된다.

특히 중장비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디젤엔진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데, 미래형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적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4년 전 스위스 등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또한 이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청소차 등 관용차 용도로도 훌륭한 대상이라 하겠다. 최근 확대적용하기 시작한 도로청소용 수소전기차가 좋은 예다. 청소차 등은 주택이나 도로 등에서 일반인들의 환경적 영향이 큰 만큼 기존의 디젤차를 대신한다면 대체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향은 물론 현대차 그룹의 수소전기차 방향도 상용모델 중심으로 틀어가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물론 현재의 승용모델도 그냥 놔둘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대상으로 상용모델로 지금이라도 바꾸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출처:매일일보 기고\_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 행안부, 자동 부상식 안전 울타리(펜스) 등 우수 아이디어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5회를 맞이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됐다.
  -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발전시켜, 국민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공모전은 미세먼지, 침수피해 등 6개 분야\*에 대해 대국민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총 30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 \* 미세먼지, 침수피해, 인명구조, 야외 활동 사고, 농기계 사고,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 공모된 아이디어의 참신성, 시급성, 기술개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건이 1차 선정되었으며, 국민 정책참여 창구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이 선정됐다.
  - 최종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 점수(50%) 및 국민심사 점수(50%)를 합산하여 선정
- 선정된 5건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 부상식 안전 울타리(펜스)는 홍수 발생 시 지면 아래 설치된 안전 울타리(펜스)가 부력에 의해 자동으로 떠올라 유실을 방지하고, 응급 시에는 부력도구로 기능하여 익수사고를 예방하자는 아이디어이다.
  - ‘차량 2차 사고 방지 비상장치’는 사고 차량의 적재함(트렁크)이 자동으로 열리고 경고등과 경고음이 작동하여 다른 운전자가 시·청각적으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2차 사고를 방지하자는 제안이다.
  - ‘식중독, 저리가 랩(wrap)!’은 식중독균이 묻으면 색깔이 변하는 랩을 통해, 음식 섭취 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이다.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스마트 터치 시스템’은 하루 3번 알람이 작동하는 단말기를 어르신이 직접 터치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함으로써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제안이다.
-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의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만 원이 수여되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년도 신규 생활안전 연구개발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상식은 올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2022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가 연구개발과제로 발전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 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산촌관계인구’를 대응책으로

- 국립산림과학원, 산촌관계인구 약 836만 명으로 추산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촌관계인구’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에서는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 그동안 산촌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교류인구는 단발적인 성격이 크고 정주인구는 진입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워케이션(workcation)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근무 시스템의

일환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 또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 이중,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 관계확대 인구는 「2021 산림복지시설·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IFoS 산림정책이슈 제159호」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써내려가다

-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방송작가협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임기홍, 이하 “협회”)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 자살 예방 관련 극본 공모전 개최, ▲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으로,
    - 방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극본 공모전’을 7월 25일(월)부터 10월 7일(금)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영상콘텐츠 내 자살장면 표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재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공모작은 전자 우편(prt@ktrwa.or.kr)을 통해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수상작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을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하고(9월), 가이드라인 관련 방송작가 세미나(10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구체적인 선정적인 자살장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4개 원칙으로 2019년에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함께 제정하였다.

####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 동반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하반기에는 현직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세미나 및 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알리고,
  - 미디어 속 자살장면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 “미디어가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삶의 기로에 선 소중한 생명들이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의 위험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라며,

-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많은 방송작가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임기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방송작가들도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작가들이 만드는 이야기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계속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책브리프

# 디지털플랫폼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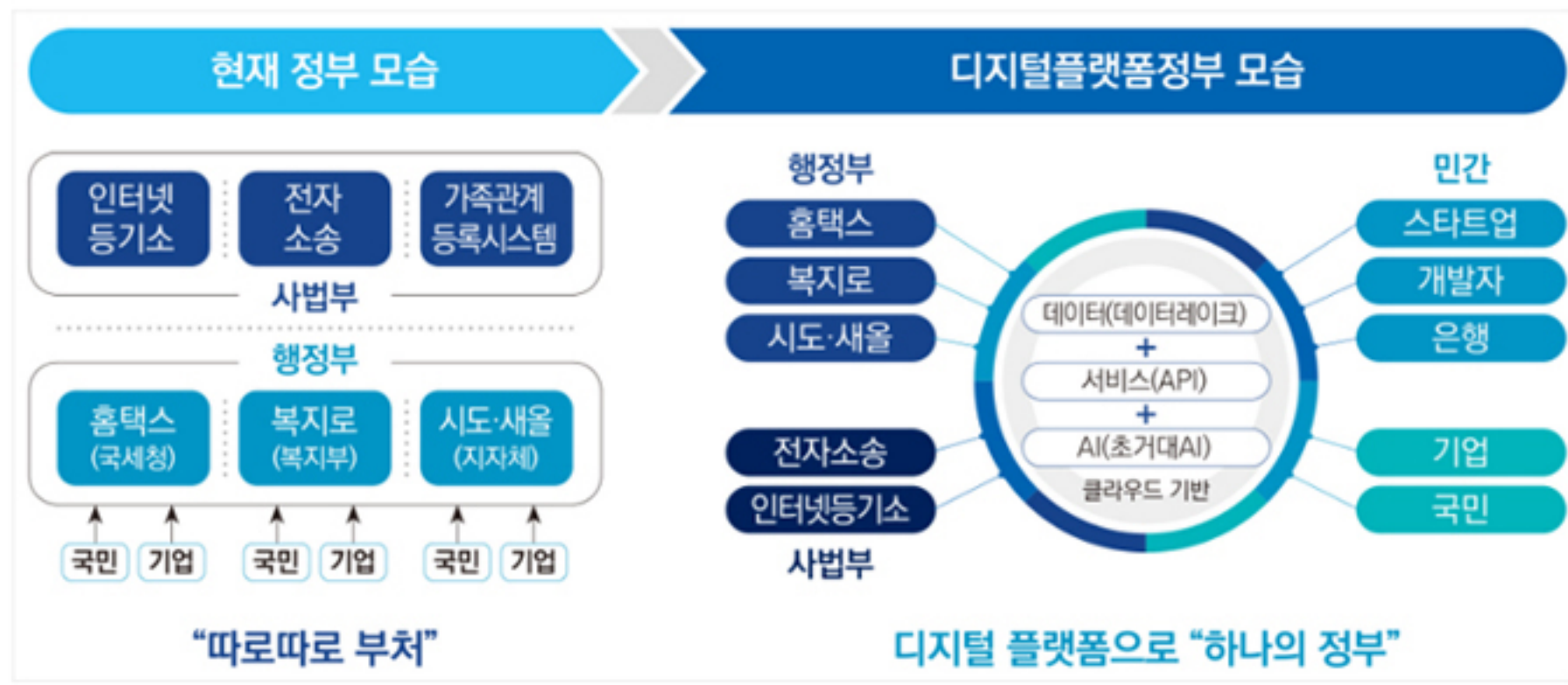
유란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새 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 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던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모델을 추구함(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b)

• 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구상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a),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 디지털 플랫폼의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①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 '먼저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구현, ③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국정운영'으로의 개편, ④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생태계'조정, 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보장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전략 필요

-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디지털 격차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발전 전략은 논의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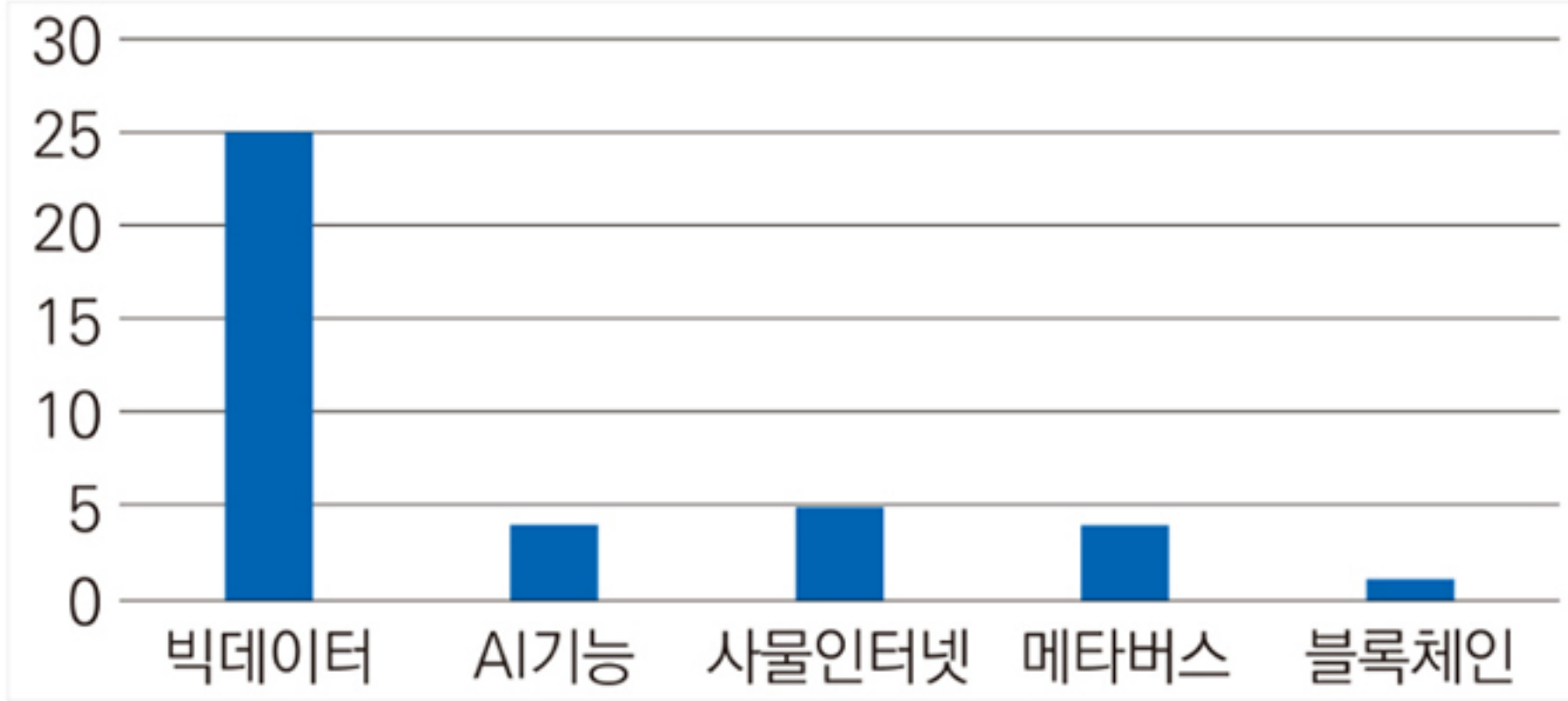
## 2.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플랫폼 활용 인식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기술 수준

-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8개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는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AI기능이나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은 빅데이터 활용의 1/5 수준에 그침(유란희 외, forthcoming)

- 지역·상황별 복지수요 현황을 제공하거나 복지자원의 분포 정도를 파악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
- 그러나 수요와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은 활용되지 못해, 복지체감도 향상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 광역·기초지방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술 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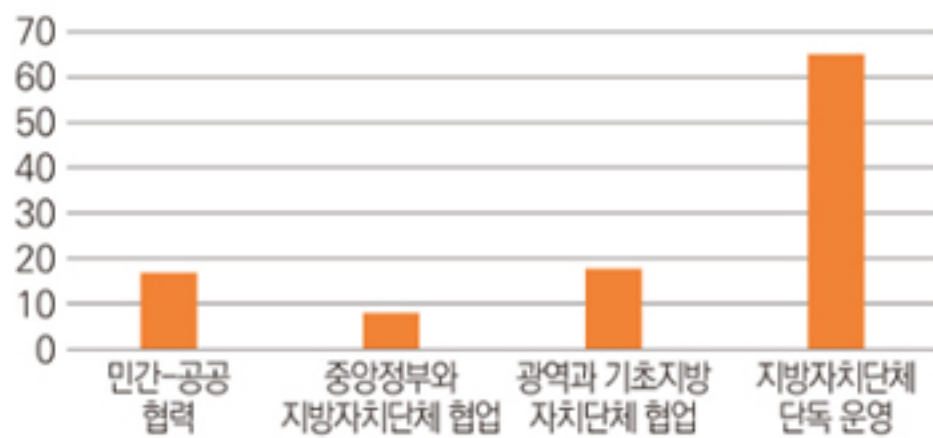


자료: 유란희 외, forthcoming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플랫폼 운영 주체 현황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함
  -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비중 다음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순서로 운영함
- 향후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책임 주체에 대한 답변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활용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반면,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조직·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대다수임

●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주요 주체 현황



● 향후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주요 책임주체 인식



자료: 유란희 외, forthcoming

##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 디지털 격차의 해소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장 큰 한계로 고령화로 인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많지 않으며, 그로 인한 낮은 정책적 필요성을 손꼽았음
- 도시화 지역과 농촌 지역 간에, 고령화된 지역과 젊은 인구 유입과 구성이 많은 지역 간 일수록 디지털 격차 심화 경향을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맞는 전략수립 필요

-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맞는 전략과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가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이 설계되더라도, 이용자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실효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
-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관리자, 이용 주민 대상의 교육은 물론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 인구가 과밀된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플랫폼 활용을 도와줄 인력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플랫폼 관리자의 기술 습득을 위한 별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플랫폼이 마련되어도 지역 내 노인계층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지자체 담당자와 대면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인력이 유지되어야 함(예. 복지서비스 수급을 위한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운영)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유란희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

알기쉬운정책용어

2022.07.20.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방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7

2022.07.20. 질병관리청

##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 확대**

- ▶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먹는 치료제 보유량 확대 및 적극 투여**

먹는 치료제 94.2만 명분 추가구매 추진  
\* 총 확보 물량 106.2만 → 200.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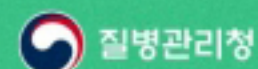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원내처방기관 확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총 1,064개소, 7.20.~)

2/7



알기쉬운정책용어

2022.07.20.



## 근거 기반 및 전문가 정책참여를 통한 위기대응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 수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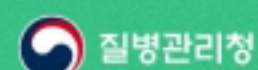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권고안 고려하여 주요 정책 결정

근거 중심, 전문가 집단지성에 기반한 정책권고  
정책권고안 및 관련 근거는 국민께 공개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4/7

2022.07.20.



## 감염취약시설 보호 강화

###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양병원·시설 등 방역수칙 재강화

**현재** 주 1회 PCR 선제검사 →

**유행상황 악화 시\*** 주 2회 PCR + 주 2회 RAT (필요시)

\* 하루 확진자 20만 명 이상 발생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강화

###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등 현장 대응 강화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통해 관내 요양병원·시설의  
주요지표(확진자수, 사망자수, 투약율 등)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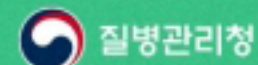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 공급 및 신속한 원내처방



5/7

알기쉬운정책용어

2022.07.20.



## 감염취약시설 보호 강화

###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양병원·시설 등 방역수칙 재강화

**현재** 주 1회 PCR 선제검사 →

**유행상황 악화 시\*** 주 2회 PCR + 주 2회 RAT (필요시)

\* 하루 확진자 20만 명 이상 발생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강화

###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등 현장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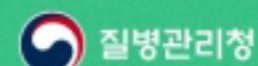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통해 관내 요양병원·시설의  
주요지표(확진자수, 사망자수, 투약율 등) 모니터링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 공급 및 신속한 원내처방



5/7

2022.07.20.



## 검사 접근성 제고 및 검역 강화

### 임시선별검사소 단계적 확대 설치

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 선제적 설치 추진,  
향후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 확대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 추진



### 입국 후 PCR검사 강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1일 차 PCR 검사

지방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확대를 통한  
검사 접근성 제고

\* Q-code상 입국자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관할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관리 강화



6/7

알기쉬운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